

제36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0월30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 2. 업무보고 ..... 2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심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특위가 뒤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회의를 밀도 있게 또 압축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바빠서 그냥 가셨는데요,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이번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느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을 때보다도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그 말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활동을 해서, 특히 우리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틀림없이 이번 정개특위는 대한민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아직도 착 전이기 때문에 지난번 해외국감 때문에 참

여하지 못하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심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가 늘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를 통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도착하셨는데요,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20대 들어서 정개특위 세 번째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정개특위는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 개정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다음은 방금 도착하신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자유한국당 정양석 위원입니다.

온 국민의 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법 개정, 선거구제 변경에 대해서 다루는 정개특위에 이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관례로 보면 선거법은 늘 선거 직전에 합의되거나 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예측 가능하게 그런 국민의 뜻을 모아 내는, 결실을 맺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의견 보고를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를 2개로 구성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외에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되, 위원 수는 각각 11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께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심사에 관한 소위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또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께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외에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에 대한 소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 것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장과 3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10시14분)

○위원장 심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 실현이라는 원칙 아래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선거 과정

에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였고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의 공약 검증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 여러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활동의 자유와 내실화를 위해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고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를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선거구 획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 중심의 선거제도 구현과 같은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신우용 실장님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 우리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정의견 제출 배경, 개정의견 주

요 내용 그리고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정의견 제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현재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정치관계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선거관리 경험과 성숙된 국민 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회계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개정의견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부분입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소품과 표시물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설물과 인쇄물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를 폐지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일반규정인 제254조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전국 단위로 결성된 대규모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선거 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 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은 비록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개정의견입니다.

공약 개발과 후보자 자질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40일부터 이틀 동안 앞당겨 실시하도록 제안하였고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언론활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경우 등급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서열화 허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비교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열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기구를 설치하고 선거일 전 1년부터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비용추계액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참정권 확대와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한 개정의견입니다.

먼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권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제안하였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선거비용 반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선무효 대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에 당선이 무효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에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정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당내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당내 민주화를 위하여 구·시·군당 대표자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해당 지방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시·군당 운영비용의 합리적 조달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하고 당비 수입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구·시·군당이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정책경쟁 중심의 정치·선거문화 형성을 위해 정책연구소 연구진의 정책실명제와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연구소 연구출판물의 유상판매를 허용하는 등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현행은 금지된 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50을 우선 지급하는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당 재정의 과도한 국고의존을 방지하고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체제를 개선하며 재정 확충을 위한 정당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칭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국고보조금 지급에 당비 납부액을 연동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의견입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선거의 당선자·낙선자는 후원회를 두지 않은 사람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기탁금과 보전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모두 지출한 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지출 금액은 7일 이내에 환수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도 선거법 죄신고자에 준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매번 발생하는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기존에 국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기존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금년 10월 15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투표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주된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그 후 입법시한이 경과되어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투표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1989년 개정된 이후 변화된 정치 선거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할 수가 없으므로 전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정당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정당법의 등록취소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취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제19대 국회에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였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 질의 순서를 저희가 간사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한 말씀씩 하셔야 되지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순서는 간사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 볼게요.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선거규제위원회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선거뿐만이 아니라 일상 의정 활동 모든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도 늘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현행법에 따라서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다……

○기동민 위원 국회에서 선관위의 권한을 막강하게 늘려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우문인데 제 느낌에는 선관위가 국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면서 선거문화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관료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단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저희는 어쨌든 현행법을 집행할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행법에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낼 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건 규제를 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애초의 취지상, 취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운동 방식, 정치활동 방식, 정당운동 방식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개정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돈은 묶고 입은 푼다. 17대 때 2004년도에 아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과정들이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상당히 강력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들이 태동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큰 차원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돈은 묶고 입은 푼다 이 정신이 그대로 현실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저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현실에서도 그 방침이 구현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돈은 묶고’ 이 표현이 돈은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지나치게 묶어 놓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현역 의원이 드리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긴 한데 음성화되어지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칫 정치 하는 사람들이 뭔가 법규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변의 평가들도 있다는 얘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입은 푼다’ 전혀 입이 풀린 것 같지 않아요. 규제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운동 과정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명함 몇 장 돌렸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고 그리고 또 지지 호소라든지 아니면 나의 정견 발표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현실이 저는 정말,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차체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현실화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좀 균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인들에게도 형평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출발선상도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

분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후원회 문제입니다. 후원회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상은 후원회 문제가 정치 신인들한테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는, 최소한도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선거비용 정도는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요. 또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도 비교적, 대표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동민 위원 예전에는 당원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다 그랬는데 정당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자는 시대적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차제에 이 부분들도 같이 손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연령 18세, 19세로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지금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OECD 국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차제에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서울 강북갑의 정양석 위원입니다.

총장님, 자료 13쪽의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구·시·군당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제가 정개특위에서도 한 번 코멘트 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 한번 보세요.

구·시·군당 설치 제안 이유가 있는데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내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나 이 용어가…… 그리고 생활정치를 위해서 설치 가능하다, 그다음에 당내 민주화 절차를 해 봤어요. 선관위가 정당을 보는 시각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시·군당이 없어서 당원협의회 형태

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걸 만들자고 하는 필요성과 문제성을 같이 정당 내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딱 이렇게 지구당이 부활되면 당내 민주화가 될까 걱정된다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쓸까 걱정된다, 그것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소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 이것은 선관위가 정당을 보는 굉장히 편향된, 잘못된 의식이 깔려져 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도입한다. 각 정당이 당내 민주화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지구당 만들지 마라, 만들 생각도 하지 마라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당법에 전제되어 있는 시·도당 혹은 중앙당 대표 선출 과정에도 이렇게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고 이걸 법에 규정합니까? 아니면 각당이 적어도, 각당이야말로 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투표, 심판을 받습니다. 당헌·당규가 투명해야 되고 민주화된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당이나 중앙당의 당대표자 선출에 관한 것도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위 당부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군당에 대해서 당내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선출 방식까지 규정하는 것은 오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이런 표현까지, 당내 민주화를 지적해서 해 놓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들을 얼마나 민주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구당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것 굉장히 고민된다고 하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준 거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양석 위원 답변이 아니라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욕적이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양석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

아니, 어떻게 같은 문구를 보고, 적어도 선관위

가 이런 문구를 만들고도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위원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정당을 보는 시각들이 이게 바로 갑의 자세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쓰고 이런 개선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2004년도에 지구당을 폐지할 때 왜 폐지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지구당 사당화, 그다음에 돈 먹는 하마, 고비용 저효율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의견을 작성한 것입니다. 절대로 현재 정당이 비민주적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시 지구당 폐지 배경을 담백하게 표시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오만하게 하는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을,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떤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각 정당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유불리 분석을 합니다. 이 선거제도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어떻게 몇 석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이나 득표율을 끌어들이고 유불리 분석을 하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석이 맞는 경우가 또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그때 목표, 민주당의 목표가 맞아떨어졌습니까? 전혀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

주 역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선 계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배분 등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새로운 정당들이 저는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또 정의당·민주평화당 이런 기존 정당들의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들도 그렇지만 언론들도 이제 새로운 정치문화 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거 지향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을 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선거제도가 제대로 개편된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 확보할지 170, 180석을 목표로 한달지 이와 같은 목표 자체가 정말 허황되고 어리석다,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그것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연대화를 하는 연대의 정치가 앞으로 정상적인 정치의 틀로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도한 목표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부르고 결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열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정치 개혁에 관해서 좀 더 핵심적이고 알짜인 것만을 가지고서 하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하지도 않고 정당이 관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히 선거가 되고 있어요.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당선된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자신의 개성에 치우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정당이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이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라든가 이런 것

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지방단체장 같은 경우도 특별시, 광역시와 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보다는 광역시제의 하나의 어떤 광역 단위의 일체성, 통일성이 중요하고 도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치구청장들에 대한 선거 방법도 꼭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다른 부분은 다 동감하고요 교육감 선거제도 부분도 저희는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인식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임명제로 다시 돌아간단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러닝메이트제를 한다든지 차라리 정당이 그냥 공천해서 관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은 나와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해 주시는 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김동철 위원님 여러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경기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에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꼭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선거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거구제지요, 그렇지요?

오늘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사무총장님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싶은데요.

우리 정치개혁위원회가 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선거구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선거제도와 관련한 선관위의 입장, 제안 이런 것이 먼저 오늘 보고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10월 30일 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관위가 제안했어,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김상희 위원 15년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김상희 위원 2015년도에 제안하셨는데 지금도 선관위의 입장은 더 달라진 것도 없고 보완할 것도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김상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제안했을 때와 지금하고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강도가 좀 높아졌지요.

일차적으로 오늘 보고에서 선관위가 우리 국회에 제안하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보고하고 선관위에서는 왜 그런 선거제도를 국회에 제안하는지를 보고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2015년도 제안한 권역별……

2015년 5월 25일 개정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19대입니다. 19대 때 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고하셨어요. 저는 선관위가 이것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는 선관위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위원회에 임하고 그리고 정치 개혁에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참고자료로 뺀 이유가 지금 개정의견 보고에서 보고된 부분은 다 이번 원구

성 이후에 개정의견 제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구제 관련한 것은 직전, 19대 국회 때 제출했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총장님, 이것 19대 때 제안한 거 같아요? 아무리 연속성이 있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정말 선관위가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지와 성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서면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금 제안을 보니까 선거구 획정이 현재 보면 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1명 지명하고요, 그리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방식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으로 해서 지난 19대 때도 보니까 아주 마지막까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사실은 확정위원들이 활동을 못 했어요. 왜 못 했느냐? 국회에서 결정을 못 해 줘요. 지역구 의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분들이 다 정당 배경이 있어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하는 그런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간을 다 넘기고 막판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심상정** 예, 1분 더 쓰십시오.

**○김상희 위원** 선관위에서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면 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1명씩 하고 그리고 선관위 내부 의결을 해서 6명으로 위촉해서 의결 권한을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관하고요 정족수 요건을 과반으로 했어요.

이것은 진짜 선관위가 국회를 무시하는 방안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여러 가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안을 냈습니까?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실망입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도 않고, 내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19대

때 한 것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선관위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권한만 높여 놓는, 확대해 놓는, 권한을 늘리는 그리고 국회를 패싱하는 제도를 지금 가져왔어요. 저는 이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관련해서 법안을 낸 게 있는데요. 다음 필요할 때 소위나 이런 데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료를 가져온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정말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미처 생각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구요. 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정의견을 제출할 때 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 거친 상태에서 19대 것을 20대 국회에 바로 그냥 개정의견으로 제출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참고자료로 제출했구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의 안으로, 어쨌든 방향은 저희들은 지난번 확정위원회가 지나치게 정당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굉장히 늦어졌고 또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굳이 이렇게 저희들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또 저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정** 아마 여러 위원님들 뜻도 같은 텐데요. 중앙선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하시기도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방향과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주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입법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이에 관련된 선관위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여러 참고자료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안과 또 김상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적으로 위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중에 관련 추천 단체들에게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기로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안을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처리한 이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되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나중에 다시 논의를……

**○김상희 위원** 국회가 지금 선거 관련해서 날짜를 전부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날짜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해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정** 하여튼 김상희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간사단 회의에서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심상정** 이따가 추가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이자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기도 하고 또 정개혁위는 처음 하는 거라서 생소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봐도 봐도 모르겠는 게 공직선거법인데, 일단 저는 먼저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오늘 정개혁위에 관련돼서 업무보고 시 국회의원들께 보고하는 것도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보고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구제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선거구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거구제를 내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건지 아니면 소선거구제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회의 이 모든 부분들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또 하나, 저는 공직선거법 봐도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4페이지 보게 되면 ‘선거운동 허용 단체’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출한 경비 내역도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정치 신인이라든가 청년·여성들에게는 이게 정말, 이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형평성이 좀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출한 경비 내역이라면 대규모 단체, 등록된 단체는 어떻게 선거비용을 써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언론기관의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서열화를 허용하겠다

고 했는데 이 서열화라는 게 어떻게 허용하고, 이 서열화라는 게 맞는 건지, 이 표현이 맞는 건지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용추계 관련 돼 가지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재정 규모가 30억 원 이상 될 때는 비용추계 요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 의석을 한 석도 가지지 않은 정당에서는, 이것은 또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단체 선거운동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각종 정치인 팬클럽이 전국 단위로도 구성이 되고 또 지역 단위로도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인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 부분은 이미 기정치인이 되신 분들에게 유리한 거고 신인·청년·여성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정치 신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이라든지 또 말로 하는 진화 선거운동의 허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히는 개정의견도 동시에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다음 서열화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공약을 평가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싶어도 유권자들이 사실은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서열화나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소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임 있는 언론에 한해서 유권자들에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저희 입장입니다.

**○임이자 위원** 책임 있는 언론이 편파적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여론도 조작한다는 판에 무슨……

그다음에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비용추계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없고 또 실제 그 공약의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고 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 정도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산 3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런 정당의 공약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총장님,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지금 2015년 2월 달의 개정의견이 지금도 선관위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이게 23쪽에 적혀져 있는데 이 선거제도 개편의 초점이 결국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에 불비례성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써 놓고 있던 말이에요. 결국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가장 민주적이고 민의에 맞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정의견으로 19대 때 제출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쨌든 의석수와 득표율의 비례관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적인 선거구제 개편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렇습니다. 왜 비례성을 높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현행 선거제도가 결국 굉장히 불비례하게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표가 사표가 되어 버리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정개특위를 통해서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고 했던 말이에요. 지금 선관위안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6개 정도로 전국을 권역화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비례대표를 뽑자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전국을 하나로 하는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6개 권역으로 나눠야 하나요? 그 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하는 그것을 같이 가미해서 하자는 개정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영호남 쪽의 특정 정당이 지지도가 치우치는 지역에서 권역별로 했을 때 세가 약한 정당도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마리로 해서 정당의 지지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게 됐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비례대표 연동제를 하면서 전국 단위로 하는 나라도 있고 권역별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 위원** 또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지만 문제는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선관위 의견대로라면 총 정수 300명을 그대로 놓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정도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 수준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현재의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선거 때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면서 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선거에 관해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면서 또 총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회 예산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예산 등등을 동결하면서라도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60명 선이라는 분도 있고 여러 안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총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의원 정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런 국민 동의하에서 의원 정수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정치관계법의 큰 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꼭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표 얻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민심 그대로의 의석 점유가 꼭 필요하다. 즉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 얻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면 현행 양당제가 정착되지 않고 이제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의 개편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권력구조의 개편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과도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적인 정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당제하고 권력구조 개편이 맞물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꼭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필요는 없다. 분리돼서도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현실적으로 다당제가 되면 한 당이 국회를 이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권력의 분점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서 선관위가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관위도 다소의 부담은 있지만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박병석 위원** 선거권 연령 인하 조정의 문제인데요. 지금 OECD 30여 개국 중에서 선거 연령을, 투표권 연령을 19세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진 모든 각국이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데 소위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30여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9세로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에 대

한 충분한 논의나 또 입법정책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18세가 되면 일부 고3의 연령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의 문제를 공론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로 볼 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지 않은다고 봅니다. 충분히……

○**박병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이번에는, 이번 우리 위원회는 결론을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보면 돈 선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 전파가 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따라서 돈은 묶고 발이나 말은 푸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벌칙 강화보다는 벌칙은 지금 현재도 충분히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을 경우에.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사후 조치를 하고 또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삭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조지를 확대한다든지 인력을 좀 더 전문성을 기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를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효과적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 위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노력해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저는 우리 정개특위 출범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결단을 하려면 우리가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라는 게 일종의 평가 제도거든요, 평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해요. 문법 시험을 보면 10년 내내 문법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해요. 회화 시험을 보면 열심히 회화 공부를 해서 말을 잘하게 됩니다.

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회의 활동이 달라지는 거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국회의 활동이 정말 국민을 대표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느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서 그것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제일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회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국회의 제일 핵심적 기능으로 민주적 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왜? 예전에는 대통령 KBS 조선일보 아니면 관권 재벌 이런 유력자들이 결정하면 사회가 그냥 뒷받침해주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결정해도 잘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합의했다, 이 민주적 합의 이외에는 중요 결정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앞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시민 역량도 높아졌고요 경제 규모도 높아졌고요 소통도 되게 확대돼서 이 민주적 합의를 어떻게 우리가 강화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국

회가 그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민주적 합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민주적 합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합의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이른바 비례성과 관련된 문제지요. 또 하나는 이 의회라는 데서 결정할 때 공공적인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 대표하고 자기 정파 이해관계 대표하고 내가 노조 출신이다 기업 출신이다 그것 대표하고 이게 대표성 문제입니다. 이 대표성의 결함이 치유돼야 된다……

지금 단순한 비례성 얘기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과 세력이 참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치자, 좋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대표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 대표성을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직접 어떤 대표자를 뽑는 이 직접적인 대표성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이 지역 대표성으로 인한 평가 제도가 4년 내내 지역에서의 유권자 접촉, 체육대회 가고 경로당 다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와 어떤 민심을 대변하려는 활동도 있지만 이 활동 속에는 많은 부분이 다음 재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이 공공 활동이 아니에요. 사익 추구 활동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 활동을 보면서 신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대표성 그다음에 계층의 대표성, 정파적 대표성 이런 대표성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대표성들을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대표성, 공화적 대표성, 공공적 대표성을 국회가 확립을 해야 국회의 결정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비례성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회가 국민적 대표성, 공화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단순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 또 지역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방향과 목표는 단순한 비례성만이 아니고 이 대표성, 공화적 대표성·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다양

한 학자들의 견해나 외국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법, 선거제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품질 좋은 정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 개혁의 기본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여덟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낸 그 소선거구 제도가 어떻게 현재의 정치 상황에 제대로 생산적으로 역할을 못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건 혹은 선관위 생각이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오랫동안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단점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사표도 너무 많고 비례성도 낮고 아까 김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활동에도 지역구에 너무 의식을 하시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례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 정수 확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천 과정에 민주성이 전제가 돼야 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일반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더 확실하게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거를 여러 번 치렀지만 그래서 다수당이 여러 번 바뀌어 봤지만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인 정쟁 위주, 이분법적인 정쟁의 구도

이런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잘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이야말로 국민들에게 훨씬 생산적인 정치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특위도 갖고 또 선관위도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잘 말씀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치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미 지방선거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너무 지역구에 과도하게 매이게 되면 그 또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품질 좋은 정치적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점도 선거구 개정 논의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득권을 갖고 있거나 조직력이 센 쪽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발언권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목소리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정치적 대변 통로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점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대기업 정규직의 목소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치권에 반영이 되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취약근로계층이라든가 자영업 청년 여성 또 노인들 이런 분들은 잘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점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금을 얼마나 걷고 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게 핀셋 증세다 찢끔 복지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대로 해 보려면 큰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소소하게 제안하고 열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다음에 뭔가 경제를 공정한 경제로 가져가면서도 규제를 풀 것은 풀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해야 될지 이런 점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더 좋은 민생 경제를 챙겨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넓혀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존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구제도는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바는 여기에 당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으신

만큼 우리 정개혁위 위원님들의 사명감과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서 전체 국회의 논의를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관위 경우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논의 참고자료 수준으로 선거구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나 쟁점이 있을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요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 참고자료 수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든 도농복합선거구제도든 기타 어떤 제도든 또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두 제도 간의 절충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의 참고자료 수준으로 정리를 빨리 해서 우리 정개혁위의 논의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주문을하신 것처럼 사무총장님, 다음 주부터 우선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신 선거제도에 관한 그동안의 경과, 논점, 대안 또 다른 나라 사례 이런 참고자료를 포함해서 다음주 수요일 날 1차 토론회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위원님이 느끼는 것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분명히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저도 인식을 같

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원론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300명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과연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이걸 용인해 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결국은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권역별 비례대표가 됐건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국구로 시작해서 비례대표로 온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례대표제도가 시작됐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비례대표제도가 그러한 본기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이 됐건 연동형이 됐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문성 보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 처음 우리 국회가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일반 지역구 의원님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글썽, 과거로 따지면 거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비례대표제도로 운영되고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다른 논의되는 것들을 가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선거구제도는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 같지만 이미 중선거구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 의원님이 지금 심지어는 다섯 군데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300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요수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요.

두 번째는 저도 관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  
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선거 당일 날 불가  
피하게 투표를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입한 제  
도이고 그게 하루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틀로 늘렸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  
간을 늘렸는데 이 제도가 악용되다, 악용이라기  
보다는 뭐랄까 편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선거기간을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주는데 일주  
일 전에 민심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효과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는 선거 당일 날  
불가피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선거 당  
일 날 어디 놀러 가려고 미리 찍는 이런 방식으  
로 운영되고 오히려 선거 당일 날은 꼭 자기  
소속된 주소의 투표소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사  
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선거 결과를, 민심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를 들  
면 선거 하루 전에, 이틀 전서부터 사전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운동의 효과가  
투표에 반영되게끔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들이  
현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좋고 중·대선거구든 저  
희들은 어떤 것이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개정의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문제점들을 해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던 부  
분이고 특정 의견에 꼭 얽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전투표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전투표라는 게 사실은  
본선거 때 투표를 못 하는 분들을 위한 보완 투

표로서 도입된 것인데 최근에는 약간 바람처럼  
세몰이하는 식으로 투표가 돼서 저희들이 염려하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문제의식  
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  
하는 이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총장님, 저는 지금의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생  
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  
고 보지는 않습니다. 입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났으니까 그렇게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  
치가 입법을 통해서 역할을 잘못 설계한 책임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가 질 책임은 아니  
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우리 선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  
정합니다. 그런데 지내 놓고 보니까, 이쯤 돼서  
보니 선거관리가 아니라 아까 선거규제라는 말씀  
도 하셨는데 저는 정치규제위원회인 것처럼 비치  
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직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선거가 정치의 꽃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꽃인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열매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률을 통  
해서 보통 사람의 삶을 규제하는 거라고 하면 꽃  
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데 뭐  
가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 꽃이 피는 과정에 대  
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설계해 볼 필요가 있  
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보고 중에 우려스러운 것은 정당 내  
부의 운영과 관련된 것까지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걸 너무 나갔다고  
보다는 아예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저  
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당 내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밀하게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듣기에  
수많은 정치학자들 중에 정당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희귀한 전공자가 정당 내부에  
관한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그건 각 나라마다 상  
당히 자율적으로 남겨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겁니다. 이른바 선거제도 전문가는 있습니다만 정당 내부의 운영이나 조직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그만큼 정당의 내부 운영은 민주적 질서라는 큰 원칙만 가지고 규제하고 있다, 정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천이나 정당활동, 시·군당 대표자 선출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건 제가 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선관위가 그야말로 헌법 114조에 정해 놓은 대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관리위원회로 이제는 정상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상화의 과정을 입법을 통해서 얼마나 잘 열어 주느냐가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선관위를 뭐라고 타하거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지요, 대폭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 놓는 것부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정의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도 아예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헌법 41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이철희 위원 이게 일부 해석에 의하면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게 30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해석이 있던데, 또 다른 해석은 200명만 넘으면 400명이든 500명이든 상관없다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혹시 선관위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이철희 위원 저는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

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에도 공감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일인당 인구수나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명실공히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 유권자나 국민들이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대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 정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인구수나 유권자 수에 비하면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적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왕에 저는 선관위가 이러저런 의견을 내신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아까 정양석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국민들의 동의가 있을 거다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라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 우리 상황,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후에 가야 되지만 현재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 정수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도 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도 다른 데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주실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은 저희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말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뒤늦게나마 정치개혁특위 돼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선관위 보고를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오늘 보고하여 주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이걸 보면 아마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꼭 고치자고 하신 것 같아요.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 그런 저기였는데 저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규제가 많고 제약이 많고 그래 가지고 고발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허용해야 될 선거운동을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시고 꼭 많이 푸셨는데 하여간 선거법이 너무 세 가지고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범법자가 된 사람도 많고 당선무효된 사람도 많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데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외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선거 낙선하고 원외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위법 상태로 사무실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위법 상태로 사무실을 운영했고 어떤 사람은 고발당했고 저는 고발을 안 당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구·시·군당으로 이걸 했더라고요. 오늘 제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 해서 사무실이 아니라 구·시·군당으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기준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전에 지역구였을 때 문제점이 지역구의 사당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당연히 그 지역구의 대표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시·군당을,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구·시·군당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유섭 위원** 구·시·군당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위주의 그런 당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제안을 하셨는데 18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다음 선거 때까지 우리가 제기했던 부작용 문제, 학제 개편 문제라든지 어떤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노력을 하고 그러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선거구제,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습니다. 선거구제에 대해서 단일안을 내셨어요. 그것도 2015년에 제시하신 안으로 하셨는데, 사실 몇 개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일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요.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안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반대 논리도 있어요. 이게 내각제에 맞는 것인지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이합집산이 빈번한데 평균 수명이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쫓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맞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 대표를 뽑는 표가 있고 정당 선호도를 뽑는 표가 있고 이래 가지고 표의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연동하는 게 맞느냐 하는 반대 논리도 있고요. 또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 의사를 진짜 반영하려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안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주부터 공청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총장님,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질문도 있었고 지적도 있어서 가급적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모색들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 물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첫날 할 때는 뭔가 상징적인 것을 고려해서라도 일단 의제를 제안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만 또 많이 모자라는 게 현실이고 심지어 남녀 동수제도 주장하고, 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관위에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포함한 소수자의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의 선진 사례들을 좀 더 보충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논의가 활성화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투표율 제고는 사전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완적 조치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부분과 네거티브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패널티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인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이 아니고 구·시·군,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꼭 수도에 소재…… 수도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인호 위원 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지금 현재……

○최인호 위원 이것은 좀 논란의 소지도 있겠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생활정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분권적인 발상인데 정당은 수도에 꼭 소재해야 된다는 것은 반분권적 발상,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지금 저

희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토론할 여지는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그래서 선관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고 정책연구소도 오늘 제안되었고 또 시·군당도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3개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복되는 부분은 연구를 서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그다음에 기타로 제안하신 2015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이게 15년도에 해서 2 대 1 원칙으로 제안은 하셨는데, 300석을 유지한 채로 2 대 1이면 200석이 지역구인데 55개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자료로 오늘 이렇게 자료 갖고 오신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들의 단순한 참고자료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인호 위원 그 2 대 1이라는 원칙은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1 대 1은 너무 과할 수도 있는데,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로 55개의 지역구를 줄이는 게 과연 정개특위나 국회에서 합의가 되겠느냐, 그런 면들이 문제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굳이 오늘 꼭 참고자료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전향적으로 선관위가 나서서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보여 주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인호 위원 제가 아까 잠시 어디 다녀와서 못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의원님들께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총액으로 하고 그것을 나눠서 의석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런저런 전제하에 의석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인호 위원 1분만 더……

○위원장 심상정 예, 1분 더 쓰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리고 단순하게……

○최인호 위원 그런 부분이 선관위의 의견이 아니라면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일반 국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 보고, 한 명도 못 늘린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불가피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론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선관위가 나서서, 선관위의 의견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론의 장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적극적으로 총장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그다음에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의석 배분 이것은 또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의 득표수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는 점을 그냥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대득표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결국 해당 지역구 후보자 평균 득표수 대비 해당 후보자 득표수인데 결국 분모를 작게 하면 유리해지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 후보들이 나올 공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도 한번, 고민을 물론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소위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것까지

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앞으로……

○최인호 위원 이것은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유리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꼭 당선되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나 특수관계인을 일부러 출마를 위장을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 제도가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반적인 정치관계법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이번 정개특위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내겠다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실린 그런 정개특위입니다. 그런 만큼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소신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다음주에는 운영위원회 국감이 예정된 관계로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법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1차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총괄해서 핵심 논점과 또 그동안 제안되었던 몇 가지 선거구제 방안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견해를 나누는 그런 토론회 자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300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

는 것입니다. 그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특  
위 산하에 국회의원 공론화 TF를 구성할 계획임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기 동 민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성 식
김 중 민	김 학 용	박 병 석	박 완 주
심 상 정	이 철 희	임 이 자	장 제 원
정 양 석	정 유 섭	천 정 배	최 인 호

**○청가 위원(1인)**

원 혜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창	림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박	영	수
선 거 정 책 실 장	신	우	용